"검·경 개혁 등 7대법안 관철"

■ 민주당 워크숍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 와중에 맞게 된 6월 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했다.

민주당은 4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요동치고 있는 정국 대처와 6월 국회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의원 워크숍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5법과 민주주의 수호 2법 등 7대 긴급 민생·민주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민생 5법은 ▲연체이자 반감법(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록금 인상 제한법(고등교육법) ▲서민경제 활성화 3법(여신전문금융업법·유통산업발전법·조세특례제한법) ▲노인틀니법(국민건강보험법) ▲세종시설치법(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등이다.

민주주의 수호 2법은 ▲검찰 개혁(공직부패수사처 설치·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 ▲경찰 개혁 과제(집시법 개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자치경찰법 제정·공공기관감사법 제정) 등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용산참사 대책법으로 이명박 정부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 관련자 명예회복 및 배상법, 경비업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 10개 법도 함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개혁논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검찰제도개혁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참여정부시절 제기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재논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국회 앞두고 전열 재정비 나서

신문법 등 '10대 MB악법' 결사 저지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법안을 '10대 MB악법'으로 명명하고 결사 저지 입장을 천명했다.

'10대 MB 악법'은 신문법·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정보통신망및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교육세법 폐지법률안·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개혁 의지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북한인권법(제)·한미FTA비준동의안·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국가정보원법·국가대테러활동법 등 17개 법안에 대해서도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해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입장과 함께 국회 FTA특위 설치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여기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꾸준히 추진하되,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론에 대해선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보복에 의한 전직 대통령 서거사건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파탄위기에 처한 서민경제를 회생시키는 6월 임시국회를 만들것"이라며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北 경비정 서해 NLL 침범

해군 고속정 경고통신에 51분만에 퇴각

북한 경비정 1척이 4일 오후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우리 해군 고속정의 경고통신에 따라 퇴각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1척이 이날 오후 2시47분께 연평도 서방 7.5마일 근해 NLL을 0.9마일(1.6㎞) 가량 침범했고 우리 해군 고속정의 두 차례에 걸친 경고통신에 따라 51분만인 오후 3시38분께 북상했다.

올해 들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지난 2~3월에 이어 3번째며 지난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처음이다. 우리 해군 고속정은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할 조짐을 보이자 "귀 선박이 우리 관할 해역에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통신을 한 데 이어 NLL을 완전히 침범하자 "귀 선박이 우리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 즉각 북상하라"는 2차 경고통신을 보냈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할 당시 중국 어선 3척이 NLL 이남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었으며 북한 경비정은 이들 배를 쫓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아서 NLL 이남으로 남하하다가 0.9마일 지점에서 정지해 중국 어선을 주시하다가 중국 어선이 북상하자 그들도 북상했다"며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이 자국 어선인지를 확인하고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도발 상황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NLL을 침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과거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유형과 비슷했다"며 "우리 군의 예규와 교전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슈퍼노트' 제재로 北 압박

'BDA 사태' 당시 흐름 재연…中 태도가 관건

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위협을 서슴지 않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금융제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미국내에서 갑작스럽게 미화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북한 정권 실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제2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4일 현재까지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미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에 금융제재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다. 북한의 동맹으로서 중국은 현재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북한에 대한 응징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측면을 고려해 입장 정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슈퍼노트 개입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마치 2005년 9월 전격 단행된 미 재무부의 위폐단속을 계기로 북한의 존재감이 부상했고 결국 이것이 BDA에 있던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하는 'BDA 사태'로 연결된 것과 비슷한 흐름이 다시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내의 이런 움직임이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앞두고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워싱턴타임스는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오극렬 대장과 그의 일가가 슈퍼노트 제작과 유통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미국과 해외정보기관 관계자들 및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지난 2일 보도했다.

문제는 BDA 방식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다. 2005년 BDA 사태 때에도 중국은 매우 불쾌한 감정을 미국측에 피력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금융제재 카드가 실제 동원될 것인지, 그리고 동원될 경우의 파괴력을 가늠하게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프랑스 사고기 추락전 공중분해 된 듯"

전문가들, 자동메시지 분석…블랙박스 회수 난관

브라질 인근 해상에 추락한 에어프랑스 447 항공편의 블랙박스 수색작업이 기상악화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조사관들은 여객기 상황을 자동보고하는 자동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여객기가 추락 전 공중 분해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한 항공산업 관계자는 사고기로부터 보내 온 자동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일련의 부문별 작동 이상에 이어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가동 중단이 보고됐다면서 이는 여객기가 추락 전 이미 공중에서 분해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객기로부터의 자동메시지에 따르면 사고기 조종사는 오후 11시(현지시간) 비행기가 전기를 가득 먹은 검은 구름층(CBs)을 통과하고 있다고 수동 신호를 보내왔다. CBs는 강풍과 번개를 동반한 비구름이다.

또 위성자료에 따르면 당시 번개구름(뇌적운)이 상승하면서 여객기의 항로에는 시속 160km의 상승기류가 몰아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11시14분 마지막으로 보내온 자동메시지는 조종실의 압력이 상실됐으며 전기시스템이 완전 마비됐음을 알리고 있다.

이는 항공기에는 재앙적 상황으로 기체가 이미 바닷속으로 추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원자력기술원 "北 핵실험 후 방사능 물질 아직 검출 안 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열흘째인 4일 현재까지 핵실험을 단정할 만한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당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한 상공과 동해 상공에서 포집한 대기 성분을 분석하고 있지만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고 있다.

핵실험 후엔 크립톤(Kr-85)과 크세논(Xe-135) 등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데 이 가운데 크립톤은 수십 년간 공기 중에 남아 핵실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KINS는 북한의 핵실험 이틀째인 지난달 27일부터 강원도 고성군 거진 측정소를 비롯한 동해 상공에서 포집된 대기성분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INS의 한 관계자는 "해군과 공군의 협조 아래 하루 두 차례씩 동해상 여러 곳에서 공기를 포집하고 있다"면서 "공기를 정밀 분석 중이지만 아직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